

2024년 예산, 국회 의결 · 확정

- '24년 총지출 규모는 656.9 → 656.6조원으로 △0.3조원 순감 -
- 재정수지 +0.4조원, 국가채무 △0.4조원 개선 → 건전재정기조 견지 -
- 민생경제·취약계층 지원, 국민 안전 강화, R&D·새만금 보완 등 증액 -

국회는 '23.12.21일(목) 15:00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「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」을 의결·확정하였다.

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(2.8%)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.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'감액 내 증액' 조정 원칙에 따라 △4.2조원 감액, +3.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.9조원에서 656.6조원으로 △0.3조원 축소하였다.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.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.

(조원, %)

	'23년 본예산(A)	'24년		국회 증감 (C-B)	전년 대비 (C-A)
		정부안 (B)	최종 (C)		
총수입(증가율)	625.7	612.1(△2.2)	612.2(△2.2)	+0.1	△13.5
총지출(증가율)	638.7	656.9(+2.8)	656.6(+2.8)	△0.3	+17.9
관리재정수지(GDP대비)	△58.2(△2.6)	△92.0(△3.9)	△91.6(△3.9)	+0.4	△33.4
국가채무(GDP대비)	1,134.4(50.4)	1,196.2(51.0)	1,195.8(51.0)	△0.4	+61.4

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.

먼저,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다. 정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(2.8%)의 3배 이상인 8.7%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. 특히,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('18~'22년)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천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천원 인상한 바 있다. 국회 심사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장하였다.

우선,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(+ 3,000억원),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(+ 2,520억원)한다.

또한,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(시설농가·어업인 6.8만명)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(양식어민 1.3만호) 일부를 한시지원(+ 171억원)하고,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.(+ 288억원)

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'23년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(월 20만원 × 최대 1년)을 1년 추가 지원(+ 690억원)하고, 他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(월 20만원×3개월)를 신규 지급한다. 또한,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(K-Pass)을 조기 시행(7→5월)하고 환급요건도 완화된다.(월 21회 → 15회 이상)

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'13년 이후 최초로 +1만원 인상(+ 269억원)하고,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다.

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천명 확대하고,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·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하였다.(분유: 월 8→9만원, 기저귀: 월 10→11만원)

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(+ 85억원)한다.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(+ 20억원)한다.

다음으로,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.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·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,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.

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용자 공급 규모를 +1,800억원 확대하여,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(5천호)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용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또한,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·7·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(서울 + 8편성, 김포 + 5편성)하고, 광역 버스도 + 91회/일 증차한다.

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(1천여대)는 전량 개선한다.(+ 75억원)

한편, R&D(+ 0.6조원)와 새만금 관련 예산(+ 0.3조원)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.

R&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·원천기술 연구 지원, 최신·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고,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·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하였다.

정부는 12.26(화) 국무회의에 「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」과 「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」을 상정·의결할 예정이다. 이와 함께, 내년 1.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하여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총괄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장윤정 류재현	044-215-7110 jaehyun84@korea.kr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 사무관	계강훈 원선재 최창선	044-215-7130 consecra@korea.kr ccsun@korea.kr



I. 국회 확정된 재정총량 변화

① '24년 총지출은 656.6조원 (정부안 대비 △0.3조원)

○ 총지출은 정부안 656.9 → 최종 656.6조원으로 △0.3조원 감소

* 총지출 기준 국회 심사단계에서 △4.2조원 감액, +3.9조원 증액

-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.8%로 정부안 수준 유지

○ 총수입은 정부안 612.1 → 최종 612.2조원으로 +0.1조원 증가

② '24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△3.9% (정부안 수준)

국가채무 GDP 대비 51.0% (정부안 수준)

○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 △92.0 → 최종 △91.6조원으로 +0.4조원 개선
(GDP 대비 비율은 △3.9% 유지)

○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△44.8 → 최종 △44.4조원으로 +0.4조원 개선
(GDP 대비 비율은 △1.9% 유지)

○ 국가채무는 정부안 1,196.2 → 최종 1,195.8조원으로 △0.4조원 감소
(GDP 대비 비율은 51.0% 유지)

< 2024년 재정운용 모습 >

(단위 : 조원, %)

	'23년	'24년		증감		
	본예산 (A)	정부안 (B)	최종 (C)	국회증감 (C-B)	전년대비 (C-A)	(%)
◇ 총 수 입	625.7	612.1	612.2	+0.1	△13.5	△2.2
◇ 총 지 출	638.7	656.9	656.6	△0.3	+17.9	+2.8
◇ 관리재정수지	△58.2	△92.0	△91.6	+0.4	△33.4	-
(GDP대비, %)	(△2.6)	(△3.9)	(△3.9)	-	-	-
◇ 통합재정수지	△13.1	△44.8	△44.4	+0.4	△31.3	-
(GDP대비, %)	(△0.6)	(△1.9)	(△1.9)	-	-	-
◇ 국가채무	1,134.4	1,196.2	1,195.8	△0.4	+61.4	-
(GDP대비, %)	(50.4)	(51.0)	(51.0)	-	-	-

※ (참고) 분야별 재원 배분

구 분	'23년	'24년 정부안(A)	'24년 최종(B)	(조원)
				증감 (B-A)
◆ 총지출	638.7	656.9 (+2.8%)	656.6 (+2.8%)	△0.3
1. 보건·복지·고용	226.0	242.9	242.9	-
2. 교 육	96.3	89.7	89.8	0.1
3. 문화·체육·관광	8.6	8.7	8.7	-
4. 환 경	12.2	12.6	12.5	△0.1
5. R&D	31.1	25.9	26.5	0.6
6.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26.0	27.3	28.0	0.7
7. SOC	25.0	26.1	26.4	0.3
8. 농림·수산·식품	24.4	25.4	25.4	-
9. 국 방	57.0	59.6	59.4	△0.2
10. 외교·통일	6.4	7.7	7.5	△0.2
11. 공공질서·안전	22.9	24.3	24.4	0.1
12. 일반·지방행정	112.2	111.3	110.5	△0.8

II. 주요 증액 내용

1

민생경제 · 취약계층 지원

【 소상공인 · 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】

- (소상공인)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의 일부를 감면(+3,000억원)하고,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의 일부 한시보전(+2,520억원)
 - * 구체적 지원요건, 방식 등은 추후 발표
-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*(+695억원)하고,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한시 지원(+3,000억원)
 - * (사용처) 전통시장 구역확대·업종제한 완화, 골목형 상점가 추가, (발행량) 4 → 5조원
- (농어민) 에너지,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염병·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피해 최소화
 - 시설농가·어업인(6.8만명)에게 면세유 인상분 일부(+115억원)와 양식어민(1.3만호)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(+56억원)를 한시 지원('24년.上)
 -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(+288억원, '24년.上)
 - 축산농가의 렘피스킨 백신구입·접종비 지원(+157억원)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, 오징어 자원 탐색을 위한 해외해역조사 수행(+10억원)

【 취약계층 지원 】

- (장애인)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'13년 이후 최초로 +1만원 인상(+269억원)
 -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한도를 7만원(기존 5만원)으로 인상(+18억원)하고,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 도입(+30대, +10억원)
 - 최중증발달장애인 1:1돌봄인력에 역량교육과 안전수당(月 5만원) 지원(+10억원)

- **(노인)** 저소득 노인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+1천명 확대(2,200→3,200명, +12억원)하고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(2→3년, +23억원)
- **(저소득층)** 기초·차상위·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·기저귀 지원단가를 月 +1만원(분유8→9만원, 기저귀10→11만원) 인상(+49억원)
 -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(연소득 5천만원 이하, +7.1만명)으로 확대(+57억원)
- **(의료)**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(+85억원)하고,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요양전문병원에 의료장비 한시지원(+20억원)
 - 국립대병원 필수분야의 공공임상교수 지원 인원을 확대(+20명, +44억원)하고,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·요원 추가 지원(+169명, +40억원)

【 청년응원 프로젝트 】

- **(주거)** '23년 종료 예정이던 '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'(月 20만원×^{최대}1년)을 1년 연장 지원하고, 신규 인원('24년 한시신청)도 지원(+690억원)
- **(교통)** 청년·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(K-Pass)을 '24.5월에 조기 시행하고, 환급요건(월 21회 → 15회 이상 사용시)도 완화(+218억원)
- **(일자리)** 他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의 주거·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지원비(20만원×3개월) 지급(^{신규}+56억원)
 - 취업취약청년의 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을 완화(+0.5만명, +70억원)하고,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장려금 확대(+800명, +16억원)
- **(대학생)**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(ICL)의 대상¹⁾ 과 이자면제²⁾ 를 확대(+66억원)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(기존 8구간) 지원(+1만명, +328억원)
 - 1) (대상) 8→9구간(단, 생활비 대출은 긴급생계곤란자로 한정)
 - 2) (이자면제) 기초·차상위·다자녀: 재학중→취업후 상환 개시전까지, 1~5구간: 졸업후 2년
 -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年 8개월로(+1개월) 연장(+5억원)

【 R&D 투자 보강 】

- (고용불안 해소) R&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 완화
 -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지원(+1,528억원)하고,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(1,200명) 신설(+450억원) 및 대학원생 장학금·연구장려금(+1,000명) 확충(+100억원)
 - 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장(+388억원)하고, 기업 R&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*(+1.6만명, +1,782억원)
- *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(이차보전, 최저 0.5%)로 전환
- (장비 확충) 슈퍼컴퓨터, 중이온가속기,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행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(전기료 등)·구축 비용 지원 확대(+434억원)
- (차세대·원천기술) 달탐사, 통신(6G), 모빌리티(K-UAM) 등 차세대 기술(+188억원) 및 원전 안전성,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(+148억원)

【 탄소저감 확대 】

- (온실가스 감축)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(2.7→4.2조원 공급)하고,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전년대비 2배(50→100개) 지원(+25억원)
- (대중교통)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개선을 위해 전동차(서울 4·7·9호선, 김포 골드라인)와 광역버스(+91회/일) 증차(+118억원)

【 육아부담 완화 】

- (육아근로자)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(30인 이하→초·중·고·중소기업)를 확대(+14억원)하고, 선택·원격·재택근무 장려금(月 +10만원) 상향(+5억원)
- *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비(+1억원) 반영
- (어린이집)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위생 관리지원금(月 30만원, 50인 이상 급식 6천개소) 지원(신규+108억원)

【 민생범죄 예방 · 대응 】

- (현장대응 강화)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소요*(+187억원)를 반영하고,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·서비스(+12억원) 도입
 - * ① 광역 기동순찰대(28개팀) 신설(+102억원) : 부대운영비, 안전장비·차량 구입 등
 - ② 형사기동대(43개팀) 신설(+39억원) : 사무공간 리모델링, 집기류·안전장비 구입 등
 - ③ 1급지 지구대 통합 개편(+46억원) : 지구대 리모델링 등
-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지원(신규10개 지역, +20억원)
- (마약) 공항·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+11대 추가 도입(+44억원)하고,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확대(+17억원)
- (피해지원)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용자 공급을 +1,800억원 확대하고, 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·진술조력인(+5천건) 확충(+13억원)

【 생활안전 】

- (안전사고 방지) 출퇴근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內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전량개선(1천여대, +75억원)
- (산업안전)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협회·사업주 단체의 공동안전관리 전문가(+600명) 인건비 지원(신규+126억원)

【 국방 · 보훈 】

- (첨단전력) 한국형 3축체계 보강, 무인기 대응 등을 위해 최근 선행 절차가 마무리된 보라매(양산), 레이저 대공무기 등 신규 반영(+2,426억원)
- (장병) 임관전 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 수준*을 대폭 확대(+74억원)하고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年 +2회 추가 제공(12→14회, +67억원)
 - * (현재) 月 8만원, 8개월 → ('24년) 月 18만원, 10개월
- (보훈)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+10% 인상(+70억원)하고, 보훈병원에 간호·간병 통합병상 비중을 확대(30%→40%, +13억원)

【 새만금 투자 】

-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고속도로,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(+ 0.3조원)

* 고속도로 +1,133억원, 신항만 +1,190억원, 신공항 +261억원, 지역간연결도로 +116억원, 핵심광물 비축기지 +187억원,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+62억원, 수목원 +100억원 등

【 SOC · 산업 인프라 】

- (SOC)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·국지도·철도 신규노선 설계·착공비,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 반영(+ 0.1조원)

* (고속도로) 서청주~증평 고속도로 건설, (철도)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, 문경~김천 철도 등

- (산업 인프라)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· 바이오 ·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, 시설 · 장비 구축 등 지원(+ 549억원)

* (반도체)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(+30억원),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(+43억원) 등
(바이오)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(+11억원),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(+56억원) 등
(배터리)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(+35억원),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(+25억원) 등

-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* 조기달성을 위해 + 50개 추가지원(+ 100억원)

*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%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(국정과제 31번)

Ⅲ. 향후 계획

- 정부는 12.26(화) 국무회의에 「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」과 「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」을 상정·의결할 예정

- 내년 1.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여 민생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사전절차를 신속 준비 · 추진